

프랑스 라이시테(Laïcité)의 역설*

- 종교중립 원칙의 무슬림 차별 -

오 정 은**

〈국문초록〉

라이시테는 ‘세속주의’, ‘종교중립성’, ‘정교(政敎)분리’ 등으로 번역되는 프랑스어 단어이다. 특정 종교의 우위를 거부하고, 사적 영역에서 개인의 종교 활동은 인정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의식과 표식은 제한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라이시테 원칙은 1905년 법으로 제정되었고, 이후 프랑스 헌법에도 삽입되었다. 현재 라이시테는 프랑스 공화국에서 꼭 지켜야 하는 기본이념이다.

다인종·다민족 국가인 프랑스에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는 라이시테를 종교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에 다가가는 원리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라이시테 원칙에 따라 도입된 각종 법제가 무슬림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89년 히잡 논쟁, 2004년 학교에서의 히잡금지법 시행, 2010년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금지법 시행, 2017년 프랑스 일부 지역의 부르키니 금지 등 라이시테를 이유로 전개된 일련의 사건들은 무슬림 차별이라는 주장과 함께 찬반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2021년에 일명 이슬람 극단주의 방지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여 프랑스에서 무슬림 차별 논란이 다시 한 번 가중되고 있다. 라이시테를 활용한 무슬림 차별 논란에서 전통적으로 가톨릭 문화에 익숙한 프랑스에서 가톨릭교도가 이슬람교도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가톨릭을 강조하는 극우 정당마저 라이시테 원칙을 이용하여 무슬림 이민자 생활문화를 공격하면서, 오늘날 라이시테는 무슬림 차별의 수단이라고 평가받을 여지가 커졌다.

가톨릭교의 특권 차단을 통해, 다양한 종교를 존중하며 사회통합을 지향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이민·다문화트랙 조교수(mouton3@hansung.ac.kr)

하는 라이시테 원칙이 오히려 가톨릭 사회가 특정 종교를 차별하는 수단으로 해석되는 상황은 가히 프랑스 라이시테의 역설이라 할 만하다.

주제어: 라이시테, 무슬림, 세속주의, 교권주의, 하잡금지법

차 례

- | | |
|------------------------|---------------------|
| I. 들어가며: 라이시테의 의미 | IV. 라이시테와 무슬림 차별 논쟁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 V. 결론: 라이시테의 역설 |
| III. 프랑스에서의 라이시테 원칙 확산 | |

I. 들어가며: 라이시테의 의미

라이시테는 ‘세속주의’, ‘종교중립성’, ‘정교(政敎)분리’ 등으로 번역되는 프랑스어 단어이다. 이 단어는 1871년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하지만 그 개념은 이미 프랑스대혁명 직후인 18세기 말부터 발전하였다. 1789년의 프랑스대혁명은 왕과 귀족의 특권을 타파하려는 운동이었고, 혁명정신을 계승하여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던 공화주의자들이 구체제를 배격하면서, 과거 국교의 지위를 누렸던 가톨릭을 국가로부터 분리하고자 라이시테를 주장하였다.²⁾ 프랑스대혁명 이후 프랑스는 공화정 체제를 도입했다가 왕정이 복귀하고, 또 다시 공화정이 수립되는 과정을 반복하며 19세

1) 1871년 11월 발간된 프랑스 신문 『라 파트리(La Patrie)』지에 무상, 의무, 라이시테 교육에 대한 논의에 관한 기사를 다루면서 *laïcité*라는 명사를 사용한 것이 효시로 알려져 있다. 명사형 등장 이전에는 라이시테 의미가 형용사형 *laïque*를 통해 설명되었다. 김세희, 「라이시테를 통해서 본 19세기 프랑스의 교육 근대화와 도덕시민교육」, 『한국교육사학』, 제42권 제2호 (2020), 2쪽.

2) “French *laïcité* and Islam: A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Islamic Question in France,” *The Geopolitics* (2020), <https://thegeopolitics.com/french-laicite-and-islam-a-historical-understanding-of-the-islamic-question-in-france> (검색일: 2021. 02. 20).

기 말까지 정치적 혼란기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라이시테 정신은 확산되었고, 라이시테 원칙에 기초한 법제가 도입되었다. 1801년 나폴레옹과 교황 비오 7세(Pius VII) 사이에 정교협약(Concordat)이 체결되어 국교였던 가톨릭의 위상을 프랑스인의 여러 종교 중 하나인 ‘다수 프랑스인의 종교’로 변경하였고,³⁾ 교회의 신부들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신분이 되었다.⁴⁾ 1804년에는 민법(Code civil)이 시행되어 프랑스의 각종 행정체계가 교회의 교리를 대체하는 국가의 행정으로 변경되고, 과거 교회가 담당하던 개인의 출생, 결혼, 사망에 관한 관리를 국가가 담당하게 되었다. 학교에서의 도덕교육도 종교기반 교육에서 공화국 시민교육으로 변화하였다.⁵⁾

라이시테 확산을 거부하고 교회의 권한을 회복하려는 노력도 전개되었기 때문에, 교권주의(敎權主義, cléricisme)와 반교권주의(反敎權主義, anticléricalisme)가 대립하면서 양자 간 갈등이 100여 년간 이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결국 1905년 12월 9일 국가와 교회의 분리에 관한 법(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séparation des Églises et de l'État, 일명 라이시테법)이 도입됨으로써 20세기 초부터는 프랑스에서 라이시테가 불가역적인 국가 이념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후 라이시테 원칙은 1946년 제4공화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되고, 1958년부터 시행된 현행 제5공화국 헌법 제1조 제1항에도 계승되었다.⁶⁾

시일이 경과하면서 라이시테에는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었다. 프랑스대혁명 직후에 가톨릭의 특권과 정치적 영향력 거부를 의미했다면, 19세기에는 교권주의와 반교권주의의 대립 과정에서 국가가 개인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3) 김세희, 「라이시테를 통해서 본 19세기 프랑스의 교육 근대화와 도덕시민교육」, 『한국교육사학』, 제42권 제2호 (2020), 6쪽.

4) 전훈, 「종교적 중립성에 관한 고찰: 프랑스 라이시테 원칙에 관한 콩세이데타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41권 (2013), 543쪽.

5) 김세희, 「라이시테를 통해서 본 19세기 프랑스의 교육 근대화와 도덕시민교육」, 7쪽.

6) 현행 프랑스 헌법 제1조 제1항은 “프랑스는 불가분의, 라이시테적인, 민주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공화국이다(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laïque, démocratique et sociale)”라고 기술되어 있다.

덧붙여졌다. 20세기 후반부터는 이민자 유입으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라이시테에 개별 종교의 관습보다 프랑스 공화국 시민의식이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가 추가되었다.

오늘날 프랑스 헌법에 명시된 라이시테는 프랑스 공화국 기본 원칙으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통합 논리로 인용되곤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소수종교 신봉자, 특히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도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흔히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표식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라이시테가 거론되는데, 여기서 금지해야 하는 종교적 표식으로 무슬림의 전통복장이나 종교적 의식이 언급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라이시테 원리가 무슬림 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1989년 파리 북쪽의 크레유(Creil) 지방 한 중학교에서 히잡(hijab)이라 불리는 이슬람식 머리수건 복장을 하고 등교하는 무슬림 여학생들에게 라이시테를 이유로 퇴학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표면화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무슬림과 관련하여 라이시테 원칙 적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 활동 예방을 목적으로 프랑스 정부가 일명 이슬람 극단주의 방지법안이라 불리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라이시테를 이용한 무슬림 차별 논쟁이 벌어지며 다시금 라이시테 원칙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특정 종교의 지배적 권위를 거부하면서 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논리로 시작된 라이시테 원칙이 오늘날 오히려 무슬림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도구로 기능한다는 비판에 마주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라이시테 원칙이 프랑스 거주 무슬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라이시테 관련 법제와 라이시테를 둘러싼 주요 논쟁을 분석하고, 실제로 무슬림 사회에 라이시테가 적용되는 방식, 무슬림의 종교적 표식에 대한 프랑스 일반 대중의 인식을 검토하면서, 이를 토대로 프랑스의 라이시테 원칙이 프랑스 거주 무슬림의 사회통합을 독려하는 기능을 하는지, 오히려 무슬림 차별하고 배제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지 논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프랑스의 라이시테에 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고, III장에서는 프랑스에서 라이시테 확

산 과정을, IV장에서는 무슬림 사회에 대한 라이시테 적용 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V장에서는 라이시테가 무슬림 사회에 적용될 때에는 사회통합의 기능보다는 사회 분열의 기능을 하고 있고 있음을 밝힌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프랑스의 라이시테가 형성되는 과정에는 18세기부터 시작된 계몽주의, 19세기의 실증주의, 사회주의 등이 강조하는 합리주의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⁷⁾ 하지만 오늘날 라이시테가 헌법에 명시된 프랑스 공화국의 기본 가치로서, 공화국 구성원들이 존중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원칙으로 공고화하는 데에는 왕당파와 가톨릭 세력을 상대로 반교건주의 투쟁을 벌여 승리한 공화주의자들의 기여가 크다. 프랑스 공화국 완성을 위해 활동한 공화주의자들의 노력으로 인해 프랑스의 라이시테는 다른 나라의 세속주의, 혹은 종교중립성의 용어와 다른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었다. 이웃 유럽국가나 북미국가에서도 과거 국가행정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컸고, 점차 종교와 국가행정을 분리해 온 역사가 있지만, 프랑스처럼 종교의 영향력 행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강제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⁸⁾ 그래서 프랑스의 라이시테를 논할 때에는 번역어 대신 라이시테라는 프랑스 단어 그 자체가 고유명사처럼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국내 학계에서 아직 라이시테는 친숙한 용어가 아니지만, 2000년대 이후 조금씩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2004년 일명 히잡금지법으로 불리는 ‘공립학교 내 종교적 상징 착용을 금지하는 라이시테 원칙법(Loi n° 2004-228 du 15 mars 2004 encadrant, en application du principe de laïcité, le port de signes ou de tenues manifestant une appartenance religieuse dans les écoles, collèges et lycées

7) 지규철, 「프랑스 헌법에서의 라이시테(laïcité, 비종교성) 원칙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2009), 37쪽.

8) 박단, 「무슬림 여성의 베일 착용과 ‘프랑스적 예외’로서의 라이시테」, 『대구사학』, 제102권 (2011), 63쪽.

publics)’ 제정과 2010년 일명 부르카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공장소에서 얼굴가리기 금지법(Loi n°2010-1192 du 11 octobre 2010 interdisant la dissimulation du visage dans l'espace public)’이 국내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교육학, 법학, 정치학, 지역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라이시테 문제를 다루는 한 연구가 수행되고 발표되었다.

대다수의 라이시테 연구는 프랑스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라이시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박단(2011)은 무슬림 여성의 머리수건 착용 금지를 둘러싼 논쟁 전개를 분석하면서, 프랑스의 라이시테가 이웃국가인 영국이나 독일에서의 의미하는 종교중립성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고, 프랑스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전훈(2013)은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 판례를 분석하면서, 미국과 독일에서의 종교중립성과 개념과 비교하여 프랑스의 라이시테의 법적 의미를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라이시테를 프랑스적인 특수성으로 인식하려는 데 대해 비판적 시각도 있다. 신옥근(2018)은 라이시테 연구를 프랑스의 공화주의나 무슬림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며, 거시적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⁹⁾ 캐나다 퀘벡주에서의 라이시테 문제를 소개하였다. 하지만 퀘벡주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상황이 프랑스와 다르고, 퀘벡주에서 프랑스와 다른 라이시테 문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퀘벡주에서의 라이시테라는 용어 사용은 같은 프랑스어권 지역으로서 프랑스에서 사용되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측면이 있다.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퀘벡주에서 사용되는 라이시테라는 용어에 내포된 뜻이 타 언어로 번역되는 세속주의나 종교중립성과는 구분되는 강한 정책지향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같은 프랑스어권 사용지역인 캐나다 퀘벡주에서 라이시테라는 프랑스 단어는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 종교의 특권을 거부하고 다양한 종교 신봉자가 함께 생활하는 사회의 통합을 지향하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정책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요컨대, 프랑스어 라이시테라는 용어에는 정책지향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9) 신옥근, 「다문화 현실과 퀘벡의 라이시테 Laïcité」,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63권(2018), 204쪽.

있다는 특징이 있다. 라이시테 문제 연구도 단순한 현상 소개를 넘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III. 프랑스에서의 라이시테 원칙 확산

프랑스에서 라이시테 원칙은 교육 분야에서 먼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¹⁰⁾ 1833년에 당시 교육부장관 기조(François Guizot)의 이름을 따서 일명 기조법이라 불리는 초등교육법(Loi sur l'instruction primaire)이 발표되었는데, 이 법은 초등교육을 공공서비스로 간주하고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정하면서, 초등학교의 설립과 유지는 교회가 아니라 지자체의 책임으로 정하였다. 과거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교 운영의 권한을 교회가 아닌 국가라고 명시한 것이다. 1833년의 초등교육법이 가톨릭교회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¹¹⁾ 이 법은 엄격한 의미에서 라이시테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하지만 초등교육을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교사 양성을 국가가 담당하면서 프랑스 교육정책을 종교에서 벗어나 국가관리 체제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라이시테 원칙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후 다시 왕정이 복귀하고 또 다시 공화정 들어서기를 반복하는 정치 변화 속에서 발표된 교육관련 법들은 교육의 종교적 측면이 강조되기도 하고, 세속화가 강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82년 초등교육 의무화와 함께 라이시테가 법제화되면서 초등교육에서의 라이시테 원칙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1886년에는 모든 공립학교 교사는 성직자가 아닌 사람으로 한정하는 법이 제정되어 공립학교 교육을 교회로부터 명확히 분리시켰다.¹²⁾

앞서 언급하였듯, 1905년에 일명 라이시테법이라 불리는, 국가와 교회의

10) 김세희, 「라이시테를 통해서 본 19세기 프랑스의 교육 근대화와 도덕시민교육」, 4쪽.

11) 김세희, 같은 논문, 9쪽.

12) 김숙경, 「프랑스의 이주민 통합정책: 무슬림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유럽연합전공 국제학박사학위 논문 (2019), 52쪽.

분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라이시테는 프랑스 정부의 다양한 분야의 정책영역에서 중요한 고려사항 되었다. 라이시테법 제1조 제1항은 “프랑스 공화국은 개인의 사적인 종교적 자유는 보장하되, 공공질서의 이익에 위배될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La République assure la liberté de conscience. Elle garantit le libre exercice des cultes sous les seules restrictions édictées ci-après dans l'intérêt de l'ordre public)”고 명시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사적인 영역에서 독실한 신앙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공공적인 영역에서 종교적 행위를 삼가야 했다.

라이시테 적용과 관련하여 프랑스 정부는 3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질서를 존중하는 한 자신의 신념 표현할 자유(la liberté de conscience et celle de manifester ses convictions dans les limites du respect de l'ordre public), 공공기관과 종교기관의 분리(la séparation des institutions publiques et des organisations religieuses), 법 앞에서 종교와 믿음에 대한 만인의 평등(l'égalité de tous devant la loi quelles que soient leurs croyances ou leurs convictions)이 그것이다.¹³⁾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되 공공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단서이다. 라이시테를 이유로 무슬림에게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표식을 금지할 때, 흔히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가 부가된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히잡과 같은 무슬림 여성 복장을 금지할 때, 과연 무슬림 여성 복장이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지 반론이 제기된다. 가톨릭 수녀의 복장은 금지하지 않으면서, 무슬림의 히잡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 평가할 여지가 있다.

13) <https://www.interieur.gouv.fr/Publications/Cultes-et-laicite/La-laicite> (검색일: 2021. 1. 3).

IV. 라이시테와 무슬림 차별 논쟁

1. 라이시테의 무슬림 차별 논쟁 배경

프랑스의 라이시테는 이슬람교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다. 프랑스 정부는 라이시테를 이유로 기독교가 대형 십자가를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것도, 유대교가 다윗의 별을 전시하는 것도, 관청에서 크리스마스 구유 장식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한다. 모든 종교가 라이시테의 적용을 받는데, 이슬람교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유달리 무슬림 차별 논란이 일고 사회적 논쟁으로 발전한다.

라이시테가 무슬림 차별 논쟁을 낳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이슬람교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¹⁴⁾ 무슬림에게 이슬람교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하는 규율이다. 오늘날 프랑스사회에서 생활하는 무슬림의 대다수가 가족 단위 거주민이고, 무슬림들은 가정에서 매일 이슬람 방식으로 행동한다. 프랑스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슬림이 종교와 분리된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 독실한 신자라면 이슬람 교리에 따른 복식을 금지당하는 상황을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무슬림에게는 익숙한 일상의 생활방식을 프랑스 정부가 잘못된 행동으로 간주하고 법으로 제재하는 상황이 무슬림 입장에서는 부당한 간섭과 차별로 인식하기 쉽다.

둘째, 프랑스의 무슬림 인구가 급증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라이시테의 원칙을 이유로 인구조사에서 신앙과 인종을 밝히는 것을 금지한다. 그래서 프랑스 내 정확한 무슬림 인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래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유입이 지속되었고, 전문 연구기관의 추산을 통해 프랑스 구성원 가운데 무슬림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2016년 기준

14) 박단, 「무슬림 여성의 베일 착용과 ‘프랑스적 예외’로서의 라이시테」, 『대구사학』, 제102권 (2011), 161쪽.

으로 추정한 프랑스 내 무슬림 인구는 57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8%를 차지한다.¹⁵⁾

프랑스의 무슬림 인구는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입되었고 빠르게 증가하였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직후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였는데, 노동자 가운데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이슬람국가 출신이 많았다.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1973년 석유 파동을 계기로 외국인 단순노무자 수용을 중단하였지만, 이미 프랑스에 온 외국인 노동자에게 본국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의 가족재결합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무슬림은 가족의 초청을 이유로 계속해서 프랑스로 이주하였다. 또한 유학생, 결혼이민, 난민, 외국인 전문인력 등 다양한 자격으로 프랑스에 오는 이민자 행렬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무슬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프랑스에 정착한 무슬림 이민자가 가정을 꾸리고 출산하면서 이민 배경 무슬림 2세도 증가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프랑스는 이민자를 많이 수용하였지만, 그때까지는 주로 주변 유럽국가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입되었다. 무슬림 인구 급증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었다. 무슬림의 생활방식은 프랑스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톨릭교도와 다른 점이 많은데, 상이한 문화의 무슬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 프랑스 일반 대중에게 무슬림 이민자 집단은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되곤 하였다. 무슬림 입장에서는 수적 증가로 인해 집단의 목소리를 높이기 유리해졌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직면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셋째, 무슬림 인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이 많다. 프랑스 무슬림 인구 가운데에는 단순노무직 종사자로 프랑스에 온 노동이민자와 그 자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무슬림 노동이민자들은 주로 도시 주변부의 저렴한 주택지구에 거주하였는데, 세대가 바뀌어도 이들의 경제적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를 이어가며 부모가 살았던 도시 주변 변두

15) Pew Research Center, “Europe’s Growing Muslim Population” (2017), <https://www.pewforum.org/2017/11/29/europes-growing-muslim-population> (검색일: 2021. 1. 22).

리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 무슬림이 주로 생활하는 장소는 낙후지역이 되었고, 비무슬림은 출입을 꺼리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무슬림과 프랑스 일반 대중 사이에는 심적·물리적 거리가 생기고,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생기게 쉽다.

2. 공공장소에서의 무슬림 의상 금지

무슬림에 대한 라이시테 적용이 크게 이슈화된 시작점은 1989년 히잡사건이다. 1989년 크레유(Creil) 지방의 한 중학교가 히잡(hijab)이라 불리는 이슬람 머리수건을 하고 등교하는 무슬림 여학생들에게 라이시테 원칙을 들어 학교라는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말도록 요구하였다. 학교는 히잡착용을 프랑스 공화주의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히잡 착용을 고집하였고, 학교는 학생들을 퇴학처분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 학교 방침의 적절성과 무슬림의 히잡 착용이 라이시테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이 사회적 이슈로 발전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1989년 11월 27일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은 종교적 신념을 나타내는 상징들을 착용하는 것이 세속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선동의 목적이 없는 한 학생들을 퇴학시킬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¹⁶⁾ 그러나 프랑스에서 히잡 논쟁은 계속되었다. 2003년 다시 히잡 문제가 부상하자 프랑스 정부는 2004년 국·공립학교에서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법은 무슬림의 히잡 이외에도, 무슬림여성이 눈 부위를 제외한 머리 전체를 감싸는 니캅(Niqab)과 부르카(burka), 시크교도의 터번, 유대교의 키파, 기독교의 십자가 등의 착용도 금지시켰다. 하지만 일명 히잡금지법이라 불리며 무슬림 제재법이라는 주장이 거셌다. 당시 논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오랫동안 가톨릭이나 유대교 학생들이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고 공립학교를 다닐 때에는 특별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던 프랑스에서 무슬림 학생의 히잡 착용을 계기로 라이시테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이었다.¹⁷⁾ 무슬림 복장을 둘러싼 라

16) 김숙경, 「프랑스의 이주민 통합정책: 무슬림을 중심으로」, 56쪽.

이시테 논쟁은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이 확산되었던 데 영향을 받아 라이시테를 무슬림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히잡금지법 제정으로 복장 허용과 불허에 관한 원칙이 정해졌지만, 라이시테를 둘러싼 무슬림 사회와의 갈등이 정리되지는 않았다. 이 법이 시행된 2004년 새 학기 첫날에 639명의 학생들이 히잡 등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고 등교하였고, 이 가운데 72명이 착용한 복식 벗기를 거부하여 결국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8명이 퇴학처분을 받았고, 143명은 자발적으로 자퇴하는 방식으로,¹⁷⁾ 프랑스 정부의 라이시테 수용을 거부하였다.

이후로도 라이시테에 따른 종교적 표식 문제가 지속되다가 2009년에 일명 부르카 사건이라 불리는 논란이 발생하며 다시 한번 라이시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2009년 당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부르카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는 프랑스에서 무슬림 여성들에 대해 학교가 아닌 공공장소에서도 니캅과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비록 일부 지방이긴 하지만, 해변과 공공수영장에서 전신을 가리는 무슬림여성 수영복인 부르키니(Burkini) 착용을 종교적 표식이란 이유로 금지하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라이시테와 무슬림 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무슬림 여성 복장 금지는 라이시테를 명분으로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슬림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프랑스 사회는 히잡이나 부르카와 같은 무슬림 전통복장을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는 상징으로 해석한다.¹⁸⁾ 그래서 혁명으로 쟁취한 라이시테 정신으로 프랑스에서 인권억압의 상징적 행동을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하지만 그것은 서구적 관점에서의 해설일 뿐이며, 무슬림 당사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히잡과 같은 무슬림 여성 전통의상을 착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복장이 여성의 성적 매력을 가

17) 박단, 「무슬림 여성의 베일 착용과 ‘프랑스적 예외’로서의 라이시테」, 『대구사학』, 제102권 (2011), 178쪽.

18) 김숙경, 「프랑스의 이주민 통합정책: 무슬림을 중심으로」, 56쪽.

19) 김숙경, 같은 논문, 59쪽.

리면서 검손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한다.²⁰⁾ 프랑스 사회가 이슬람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편견 속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라이시테를 종교 차별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비난이 가능한 대목이다.

3. 이슬람 극단주의 방지법안 제정

2020년 12월 프랑스 정부는 라이시테 원칙에 근거하여 새로운 법안인 ‘공화국원칙강화법안(Le projet de loi confortant le respect des principes de la République)’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에 ‘이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법은 일명 이슬람 극단주의 방지법안이라 불린다.²¹⁾ 총 51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의 내용에 이슬람교의 교육 방식이나 종교시설 운영 등 무슬림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광범위하게 간섭하고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²²⁾ 이 법안은 가정이나 종교시설에서 3세 이상 아이를 교육한다거나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예배가 아닌 교육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모스크가 1만 유로 이상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관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게다가 의사가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처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 일부다처제, 강제 결혼 등 무슬림 사회에 남아있는 결혼문화를 단속하는 내용도 담겼다. 누군가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음을 알고도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도 있는데, 이 조항은 2020년 10월 수업시간에 무함마드 만평을 보여주며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던 중학교 교사 사뮈엘 파티(Samuel Paty)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잔혹하게 참수당한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안이 발표되자 프랑스의 무슬림 사회는 무슬림을 낙인찍는 법이라

20) 김숙경, 같은 논문, 57쪽.

21) “France passes anti-radicalism bill that worries Muslims,” *AP*, February 17, 2021, <https://apnews.com/article/polygamy-radicalism-secularism-elections-france-cbee2c916aa8c35380562277f0025c2b> (검색일: 2021. 2. 20).

22) 법안은 총 57개 조항으로, 51조까지는 이슬람 극단주의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52~57조에는 과도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 강하게 반발하였다.²³⁾ 비무슬림 사이에도 공권력으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무슬림이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계되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에 적극 찬성했다. 그리고 2021년 2월 16일 프랑스 하원에서 찬성 347명, 반대 151명, 기권 65명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²⁴⁾ 아직 상원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법안 통과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프랑스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크롱 대통령이 극우 지지층의 표를 얻고 경쟁자인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Marine Le Pen)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 대표를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극우정당은 이민자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출하고, 무슬림에 대한 공격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 법이 프랑스 공화국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랄드 다르마넵(Gerald Darmanin) 내무부 장관은 투표에 앞서 “공화국을 위해 필요한 법안”임을 강조했다.²⁵⁾ 장 카스텍스(Jean Castex) 총리는 “이 법안은 이슬람과 이슬람교도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²⁶⁾ 분열과 증오를 확산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에서 자유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23) “Why Has France’s Islamist Separatism Bill Caused Such Controversy?,” *Foreign Policy*, February 23,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02/23/why-france-islamist-separatism-bill-controversy-extremism> (검색일: 2020. 2. 28).

24) “France passes anti-radicalism bill that worries Muslims,” *AP*, February 17, 2021, <https://apnews.com/article/polygamy-radicalism-secularism-elections-france-cbee2c916aa8c35380562277f0025c2b> (검색일: 2021. 2. 20).

25) “‘낙인찍기’ 비판 속 프랑스 하원 이슬람 극단주의 방지법 통과,” 「연합뉴스」, 2021년 2월 1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7006600081> (검색일: 2021. 2. 20).

26) “France’s laïcité: why the rest of the world struggles to understand it,” *The Conversation*, November 21, 2020, <https://theconversation.com/frances-la-cite-why-the-rest-of-the-world-struggles-to-understand-it-149943> (검색일: 2021. 2. 20).

4. 극우정당의 라이시테 원칙 활용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ront National)이 라이시테를 당 강령으로 채택하면서 라이시테가 무슬림 차별 수단으로 해석될 여지는 더욱 커졌다. 1972년 창립된 국민전선은 2018년에 당명을 변경하여 현재는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으로 불린다. 국민전선을 창립한 장-마리 르펜(Jean-Marie Le Pen)은 2011년 1월까지 당대표직을 맡았는데, 그는 가톨릭 신봉자로서, 임기 내내 라이시테 원칙에 반대하였다.

본래 라이시테 이념은 프랑스대혁명 이후 왕당파가 프랑스의 가톨릭 정 체성을 복구하려고 시도할 때, 공화주의자들이 가톨릭 세력을 억누르며 왕당파의 복귀 시도를 차단하는 논리로 발전하였다. 가톨릭의 권력을 억제하려는 공화주의자의 논리에서 라이시테가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가톨릭을 신봉하는 극우정당이 라이시테에 반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2011년 1월 새로이 국민전선 당대표에 취임한 마린 르펜(Marine Le Pen)은 라이시테를 인정하고 당강령으로 채택했다. 장-마리 르펜의 친딸이기도 한 국민전선 대표가 라이시테와 관련하여 당 창립자이자 아버지의 입장과 배치되는 행보를 공식화한 것이다.

마린 르펜의 국민전선은 라이시테 원칙과 관련하여 “프랑스가 라이시테를 도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가톨릭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라이시테는 가톨릭 종교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에 가톨릭 친화적인 국민전선이 라이시테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⁷⁾ 나아가 프랑스는 가톨릭국가이고, 무슬림을 비롯한 이민자들은 프랑스의 가톨릭정신을 훼손하려 하기 때문에 배척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극우정당은 라이시테 원칙을 들어 정부기관의 무슬림 배려를 비난하였다. 무슬림 학생을 위해 학교에서 할랄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공교육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²⁸⁾, 도로 위에서 기도하는 무슬림을 위해 파리지 정부가

27) 오창룡·이재승, 「프랑스 국민전선의 라이시테(Laïcité) 이념 수용」, 『유럽연구』, 제 34권 제1호 (2016), 320쪽.

28) 오창룡·이재승, 같은 논문, 320쪽.

실내기도실을 제공하려는 데 대해 세금으로 기도시설 제공하는 것이 라이시테 위반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²⁹⁾ 현재도 라이시테를 무슬림 문화를 비난하고, 이슬람교를 배척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연이은 테러 행위, 예컨대 2015년 1월 샤흐리엠펙도 사무실 테러, 2015년 11월 파리 연쇄테러, 2016년 7월 니스테리 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약 2년간 프랑스의 국가 비상사태를 경험하면서 프랑스 대중 사이에는 이슬람에 대한 공포와 편견이 커졌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라이시테를 활용하여 무슬림을 비난하는 극우정당의 주장은 일반 대중의 호응을 높이는 결과로 작용했다.

V. 결론: 라이시테의 역설

프랑스 정부는 라이시테 적용의 3원칙 중 하나로 ‘법 앞에서 종교와 믿음에 대한 만인의 평등’(l'égalité de tous devant la loi quelles que soient leurs croyances ou leurs convictions)을 내세운다. 그런데 오늘날 프랑스에서 라이시테는 흔히 무슬림 규제를 떠올리고, 무슬림 차별 수단처럼 사용된다. 정부의 라이시테 적용에 대해 프랑스의 무슬림들은 무슬림 증가를 경계하고 통제하는 수단처럼 인식할 여지가 크다.

프랑스에 국교는 없지만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가톨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라이시테 원칙을 무슬림 차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비난은, 가톨릭과 이슬람의 갈등, 혹은 가톨릭교도가 무슬림을 차별한다는 논리로 비약되곤 한다. 라이시테가 가톨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노력이었는데, 가톨릭이 라이시테를 이용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극우정당은 이슬람으로부터 가톨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라이시테 원칙을 활용되고 있다.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적 활동이 많아지면서, 프랑스 정부는

29) 정유진, 「프랑스 국민연합의 선거 지속성과 정당 정당화」,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2019), 53쪽.

이슬람단체에 대한 해외 지원금 차단 등을 법제화하고자 라이시테법 개정을 검토한 바 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개정안을 만들기도 하였다. 라이시테를 이유로 이슬람단체의 활동을 제약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고, 이슬람단체를 잠재적 테러집단으로 인식한다는 비난이 일면서 정부의 라이시테법 개정 시도에 대해 치열한 찬반논쟁 일어났고, 결과적으로는 라이시테법 개정은 무산되었다. 그런데 2020년 10월 샤를리 엽도의 무함마드 조롱 만평 내용을 수업한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해 참수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공화국원칙강화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안은 일명 이슬람 극단주의 방지법안이라 불리면서 프랑스의 무슬림 사이에 강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법제화를 위해 현재도 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프랑스의 라이시테 원칙이 무슬림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종교차별 수단이 라는 주장이 더욱 강해지는 상황이다. 이민자 유입이 지속되고, 점점 더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해야 하는 프랑스에서 라이시테 원칙으로 무슬림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리고 과연 라이시테로 무슬림을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이시테가 가톨릭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 건설을 추구하며 발전하였고, 종교의 우열 거부와 다양한 종교 존중을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이슬람교로부터 가톨릭교를 보호하는 수단이라거나, 가톨릭교도가 무슬림을 차별하는 수단이라고 해석되고 있다는 사실은 프랑스의 라이시테가 가히 역설적 상황에 놓인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참고문헌

- 김숙경, 「프랑스의 이주민 통합정책: 무슬림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유럽연합전공 박사학위 논문 (2019).
- 김세희, 「라이시테를 통해서 본 19세기 프랑스의 교육 근대화와 도덕·시민교육」, 『한국교육사학』, 제42권 제2호 (2020), 1-24쪽.
- 김현주,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출신 대상 이민·사회통합정책의 위기와 테러환경」,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53집 (2018), 121-158쪽.
- 민지원·조규훈, 「종교적 상징에 관한 국제적 법제 및 사례 연구: 프랑스, 독일,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시리즈』, No.2019-06 (2019).
- 박단, 「무슬림 여성의 베일 착용과 ‘프랑스적 예외’로서의 라이시테」, 『대구사학』, 제102권 (2011), 157-184쪽.
- 박단, 「히잡 금지와 부르카 금지를 통해 본 프랑스 사회의 이슬람 인식」, 『프랑스사연구』, 제24호 (2011), 85-111쪽.
- 박단, 「샤를리 엡도 사건과 프랑스 내 소수자들: 무슬림, 유대인 그리고 프랑스공화국」, 『호모미그란스』, 제13권 (2015), 83-102쪽.
- 신옥근, 「다문화 현실과 퀘벡의 라이시테 Laïcité」,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63권 (2018), 199-230쪽.
- 오정은, 「이민 2세 사회통합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새로운 실험: 학교에서의 라이시테 현장」,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2015-06 (2015).
- 오창룡·이재승, 「프랑스 국민전선의 라이시테(Laïcité) 이념 수용」, 『유럽연구』, 제34권 제1호 (2016), 309-331쪽.
- 전훈, 「종교적 중립성에 관한 고찰: 프랑스 라이시테 원칙에 관한 콩세이데타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41권 (2013), 533-556쪽.
- 정유진, 「프랑스 국민연합의 선거 지속성과 정당화」,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 정제도, 「프랑스 이민법제의 변화와 문제점」, 『입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2018), 171-199쪽.
- 지규철, 「프랑스 헌법에서의 라이시테(laïcité, 비종교성) 원칙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2009), 35-63쪽.

<https://www.interieur.gouv.fr/Publications/Cultes-et-laicite/La-laicite>
(검색일: 2021. 1. 3).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7006600081> (검색일: 2021. 2. 20).

<https://thegeopolitics.com/french-laicite-and-islam-a-historical-understanding-of-the-islamic-question-in-france> (검색일: 2021. 2. 20).

<https://apnews.com/article/polygamy-radicalism-secularism-elections-france-cbee2c916aa8c35380562277f0025c2b> (검색일: 2021. 2. 20).

<https://foreignpolicy.com/2021/02/23/why-france-islamist-separatism-bill-controversy-extremism> (검색일: 2020. 2. 28).

<https://www.pewforum.org/2017/11/29/europes-growing-muslim-population> (검색일: 2021. 1. 22).

http://www.crisp.be/crisp/wp-content/uploads/analyses/2010-06-01_AC_L-de_Coorebyter_V-2010-Politique-Neutralite_et_laicite_une_opposition_en_trompe-l_oeil.pdf (검색일: 2021. 2. 20).

<https://theconversation.com/frances-la-cite-why-the-rest-of-the-world-struggles-to-understand-it-149943> (검색일: 2021. 2. 20).

〈Abstract〉

The Paradox of Principle of Laïcité: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s in the Name of Religious Neutrality*

Jung-Eun OH**

The Laïcité, a French word, translated into “secularism”, “Religious neutrality”, or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means the principle to restrict religious markers and practices in public places while to guarantee religious activities in private area. This principle denies a privileged position of certain religion. The principle of Laïcité was stipulated by law in 1905, and it was inserted into the French Constitution in 1946 and in 1958. Nowadays, the Laïcité is regarded as one of the basic values of the French Republic.

The French government applies the Laïcité in order to integrate people from diverse races, cultures and faith.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enacted several laws to restrict religious behaviors in public places where co-exist followers of diverse religions. However, successive prohibitions imposing muslims, such as the restriction schoolgirls from wearing islamic headscarf, hijab, in school, in 1989, the enforcement of the headscarf law in 2004, the ban on wearing burqa in 2010, the ban on burquini in some province in 2017, arouse controversy with the accus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s in France. Besides, French National Assembly passed so-called “Islamist Separatism Bill” in 2021, which provoke more strong controversy.

* This research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Hansung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Migration & Multiculture Track, Hansung University
(mouton3@hansung.ac.kr).

Some say the Laïcité is a means to discriminate against muslims in French society with preponderance of Catholics. Moreover, a far-right French political party, “Front National” named “Rassemblement National” since 2018, which reveres Catholicism, adopted the Laïcité as a platform and the party uses it as a means to vilify immigrants including muslims.

The French government insists on the principle of Laïcité with the purpose of integrating multi-faith French society. Paradoxically, the principle of Laïcité arouses controversy and dispute on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s.

Key words: Laïcité, Muslim, Secularism, Clericalism, Headscarf Law

원고접수일: 2021. 02. 25.
심사마감일: 2021. 03. 05.
게재확정일: 2021. 03. 05.

